
※ 엠바고 : 행사 종료 후 보도 가능(대외협력비서관실 별도 공지)

지방시대 선포식
보도참고자료

2023.9.14.(목)

소관부처(담당과)	담당자	전화번호
산업통상자원부	박성진 과장	044-203-4420
지역경제진흥과	최선헌 사무관	044-203-440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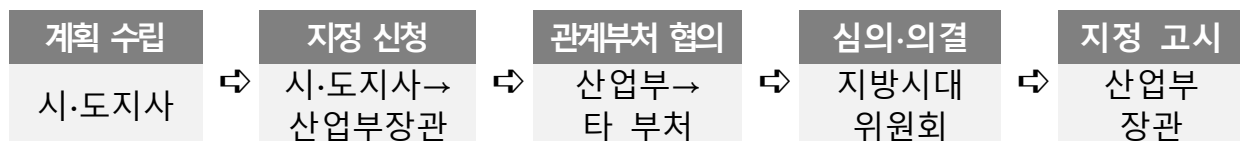
□ 정책 현황

- 그간의 다양한 경제특구 등의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, 기업, 인력 등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심화
 -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 가속화
-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,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부족으로 기업의 지방투자 부진

□ 추진 내용

- **(계획 수립)** 산업 육성전략, 지원계획, 기업의 투자계획·집적성 및 근로자의 정주환경을 고려하여 **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**
 - * 지방정부는 '시·도 지방시대위원회' 심의·의결을 통해 기본계획을 결정
- **(특구 지정)** 기본계획 수립 등 특구 신청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**지방정부가 신청 시점을 탄력적으로 결정**(수시 신청)
 - *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·의결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 고시

<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>



- **(특구 운영)** 중앙정부는 특구에 관한 **최소한의 기준만을 시행령으로 마련**하고,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·능동적으로 운영
 - 구역 선정·분할 등 지방정부가 자유롭게* 특구를 설정하고 기업 투자유치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용
 - * 예시) 상한면적(광역시 150만평, 도 200만평) 내 자율·분할 지정 가능
 - 중앙정부는 세제·규제 등 전지역 공동의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활성화 지원

□ (인센티브)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방투자 거점으로 육성

- (세제 지원) 투자재원 마련(양도세) - 투자 이행(취득세·재산세) - 경영 활동(법인세) 등 기업활동 쏠단계에 인센티브 부여
 -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시 ▲양도차익 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하며,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▲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% 감면 이후 2년 동안 50% 감면
 -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 ▲취득세는 100% 감면 ▲재산세는 5년 동안 100% 감면 이후 5년 동안 50% 감면
 - 특구 이전기업 대상으로 ▲가업상속세의 사후관리 요건* 완화
- * 특구 이전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'업종변경 제한' 및 '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' 폐지
- (규제 특례) 신속확인·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세트 외 지방정부가 규제를 직접 설계하는 '기회발전특구 특례*' 제도 도입
- * 국민의 건강·안전, 환경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지방시대위 심의·의결 거쳐 해당 규제 적용 배제
- (재정·금융 지원) 민간재원으로 기회발전특구 펀드를 조성하여 특구기업 및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며, 일정기간(10년) 이상 투자시 이자·배당소득 세제 혜택 적용(분리과세 9%)
 - 지방투자촉진보조금*의 지원비율(3~50%)을 5%p 가산하고, 저리 금융 상품을 개발하여 지원
- *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 지방이전 등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(現 최대 100억원)
- 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확대를 통해 특구의 인프라 확충 추진
- (정주 여건) 특구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(10%) 및 양도세 혜택을 부여하고, 초·중·고 설립 지원

□ 기대 효과

-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지방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
 -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로 청년들이 모여 우수인력이 공급되고, 기업은 지방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투자 플랫폼 구축

※ 기회발전특구 주요 인센티브 현황

구 분		주 요 내 용
① 세제 지원	1~2. 소득·법인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대체 취득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·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시점까지 과세 이연 • 창업기업 및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소득·법인세 감면 (5년 100% + 2년 50% 감면)
	3. 취득세	• 기업 이전 및 창업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(100%)
	4. 재산세	• 신규 취득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재산세 혜택 부여
	5. 개발부담금	• 개발부담금 100% 감면
	6. 상속세	• 특구 이전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'업종 변경 제한' 및 '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' 폐지
② 재정 금융 지원	7.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	• 자율계정 확대를 통해 특구 인프라 확충 등 지원
	8. 기회발전특구 펀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, 기업·인프라 투자 활성화 • 기회발전특구펀드*에 10년 이상 투자시 이자·배당소득 세제 혜택(분리과세 9%) *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구 입주기업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펀드
	9. 저리 금융	• 저리 융자 상품개발을 통해 특구기업 지원
	10. 지방투자촉진 보조금	•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(지원비율 5%p 가산)
③ 규제 특례	11. 3종 세트	• 규제혁신 3종 세트(신속확인·실증특례·임시허가) 적용
	12. 규제특례제도	•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하여 신청 → 지방시대 위원회의 심의·의결 후 해당 규제에 대한 특례 부여
④ 정주 여건 개선	13. 주택 특별공급	•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(10%)
	14. 주택 양도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구를 농·어촌 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 * 특구 내 주택 1채를 구입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, 해당 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
	15. 교육 지원	• 초·중·고등학교 설립 지원

소관부처(담당과)	담당자	전화번호
교육부	최수진 과장	044-203-6340
교육자치협력과	김영현 사무관	044-203-6354

□ 정책 현황

-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 간 격차 심화와 국가 경쟁력 저하 우려

※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한 이후 수도권 인구 대비 비수도권 인구의 감소세 지속

- 지역의 교육·문화·거주 기반을 개선하여 우수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정주 체제 조성 필요

□ 추진 내용

- (기본 개념) 중앙정부·지방정부·교육청·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 발전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총괄 지원

- (유아-초중고) ▲지방정부 돌봄 강화, ▲지역 주도 공교육 혁신, 디지털 수업 혁신으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
- (고교-대학) 지역 고교-지방대 연계 프로그램 강화, 지역인재 장학금·지역인재 전형 확대하여 지방대에서 역량있는 지역인재 양성

Ⅱ (가칭) 교육자유특구 선순환 체계(안) Ⅱ

	유아·돌봄	초·중·고	대학
목표	·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	· 지역 주도 교육혁신 지원 · 지역의 좋은 학교 양산	· 지역인재 유출 방지
추진 방향	· 지자체 돌봄 역할 강화 · 유보통합 시범운영	· 디지털기반 수업 혁신 · 공교육 경쟁력 제고	· 고교-대학-지역 연계 강화 · 지역 인재 선발·양성
성과 지표	· 출산율 상승	· 학업성취도 상승 · 사교육비 감소	· 지역 내 대학진학률 상승 · 지역인재 취업률 상승

- (추진 방향)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
 - (지역인재 생태계 조성)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·창업하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 지원
 - ※ 지역인재 전형 확대,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, 지역산업 연계 강화 등
 - (공교육 경쟁력 제고) 공교육 틀내에서의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 현장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지역의 공교육 역량 강화
 - ※ 단위학교 예산·사업 운영 자율성 제고,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 등
 - (지방분권 강화) 지자체의 직접 지원 강화, 교육감 권한 위임 등 특구 내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강화
 - ※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자유특구 모델 자율적 구성
 - (규제 합리화)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학교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제 완화 및 특례 지원

□ 운영 방안

- (상향식 지역교육 발전전략 마련)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모델을 자율적으로 구성
 - ※ 교육자유특구 지정 신청은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
- (특례 적용) 지역별로 마련된 교육자유특구 운영방안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추진
- (타 특구와 연계) RISE(교육부), 기회발전특구(산업부) 등과 연계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
- (교육개혁 과제 우선지원) 늘봄학교, 유보통합, 학교시설 복합화 등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를 통해 지역 공교육 경쟁력 제고에 중점

□ 기대 효과

- 국가책임 교육·돌봄과 디지털 교육혁신을 통해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제공
-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및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고른 발전을 통한 지방시대 구현

소관부처(담당과)	담당자	전화번호
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	박정수 과장	044-201-3684
	신동하 사무관	044-201-4731

□ 정책 현황

- 도심과 떨어진 외곽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산업·문화 인프라와 접근성이 열악하여 지방에 기업·인재 유치 한계
 - 지방 대도시 도심에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·주거·문화 등 복합 개발로 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

	기존 방식		도심융합특구
공간 형태	도시 외곽/저밀도 (접근성, 정주여건 부족)	⇒	도시 중심지/고밀도 (접근성, 정주여건 양호)
지원 방식	개발(H/W)과 기업지원(S/W) 분리	⇒	개발(H/W)과 지원(S/W)을 통합
달성 목표	공급자 관점의 목표 (단편적 목표, 시행자 사업성 충족)	⇒	수요자가 필요한 니즈 충족 (좋은 입지 및 기업환경 등 제공)

□ 추진 내용

- 쇠퇴해 가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職(일터)-住(주거)-樂(여가) 거점을 복합 개발 (예시: 판교 테크노밸리)
 - ① (공간 조성) 기업 지원 공간과 양질의 문화·주거·상업 시설을 도심에 종합 제공, 용도·용적률·높이 등 도시·건축 규제 완화 등
 - ② (입주 기업) 각 부처의 다양한 특구 중첩 지정* 및 기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·집중 지원

* 예시: 규제자유특구(중기부), 디지털혁신거점(과기부), 기회발전특구(산업부) 등

③ (정주 여건) 주택공급 특례,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 등 지원

④ (운영·관리) 체계적 운영을 위해 전담기관 설립

* 예시: 시·도별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및 기업종합지원센터



□ 선도사업 추진

- 지방 5대 광역시(광주·대구·대전·부산·울산)를 선정하고 지역별 특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지원

◆ 【지역별 선도사업 추진전략(예시)】

- ① (대전) 대전역과 대덕특구를 연결하는 과학기술 교류 확산 플랫폼을 구현하고, 민간 및 공공 수요 등을 포함한 명품 랜드마크 구축
- ② (부산)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하고 연계해 사업지 내부 역세권을 고밀복합 개발, 미래 모빌리티, 로봇, 인공지능,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특화육성
- ③ (광주) 시청 인근 미개발지를 고밀·복합개발하여 기업지원·주거·문화시설 등 확충, 미래차 산단, 인근 AI클러스터 등과 연계하여 AI, 자동차 등 특화산업 육성
- ④ (대구) 舊경북도청 이전지, 삼성창조캠퍼스 및 경북대 캠퍼스혁신파크와 연계한 산업·연구문화 공간을 복합개발하고, 로봇 기업 및 청년인재 육성·지원 프로그램 운영
- ⑤ (울산) KTX역세권, 테크노파크 일원을 상호 연계 복합개발해, 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프라 및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생태계 융복합 클러스터 및 첨단산업벨트 구축

□ 기대 효과

- 도심내 기업 유치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극대화

4

문화특구(대한민국 문화도시)

소관부처(담당과)	담당자	전화번호
문화체육관광부	이선영 과장	044-203-2611
지역문화정책과	김자영 사무관	044-203-2607

□ 정책 현황

- (문화도시 규정 마련('14년~))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「지역문화진흥법」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
- (문화도시 24곳 지정('19~'22년)) 개별 지자체 단위 문화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 주도의 문화정책 추진 기반 조성

□ 추진 내용

- 윤석열 정부 '대한민국 문화도시'는 개별 지자체 지원을 넘어 광역형 지역발전 전략으로 문화 균형발전을 선도
 - 권역별 대표 문화도시 선정* 및 문화도시와 인근 도시 간 연계·네트워킹 강화로 문화 동반성장 주도
- * 권역별(광역시권, 경기권, 충청권, 강원권, 경상권, 전라권, 제주권) 2곳 내외, 총 13곳 승인('23.12월) → 컨설팅('24년) 및 사업 추진('24~'27년, 지역당 최대 200억원 지원(지방비 50%))

□ 기대 효과

- 문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선도
- 지역주민의 문화 만족도 제고로 지역소멸 대응

<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 가이드라인(2023.6. 발표)>

- (정책목표) 4년('24~'27년) 동안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 추산*(KDIS)
 - ① 문화를 누리는 도시 : ◆문화향유 천만명
◆동네문화공간 1만곳
◆여가활동만족도 17%('21년) → 20%('27년)
 - ② 문화로 누리는 도시 : ◆경제 파급 효과 5천억 원
◆민·관 협력 투자유치 5천억원 ◆일자리 창출 1,700명

*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('23.12) 도시에 따라 목표값 재설정 예정

5

지역가치 창업가(로컬 크리에이터) 육성

소관부처(담당과)	담당자	전화번호
중소벤처기업부	김성훈 과장	044-204-7290
소상공인성장촉진과	이청수 사무관	044-204-7854

□ 정책 현황

- 산업·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는 ‘생활분야의 고부가가치 서비스화’ 및 ‘제조 기반 생활혁신형 창업기업’ 으로 육성

*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안('23.5.16, 중기부)

□ 추진 내용

- (교육·체험) 민간 교육기관·대학(장인학교, 로컬콘텐츠대학) 등과 공동으로 콘텐츠 개발 역량 교육·현장 체험 지원
 -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①실전창업(시제품 제작·팝업스토어) ②인턴십(장인 도제·사내벤처) ③모의실습(단기 프로젝트) 등으로 프로그램 다각화
- (사업화 지원) 창업(신사업창업사관학교, '24. 197억원) → 성장(로컬 크리에이터, '24. 68억원) → 도약(강한 소상공인, '24. 239억원)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
- (협업·자금 지원) 先 민간투자 後 정책융자매칭*(LIPS), 동네 클라우드 펀딩** 등 소상공인 특성에 맞는 스케일업 자금을 민관 협업으로 지원
 - * 민간투자사가 소상공인에게 先 투자 시 정책자금(융자)를 최대 5배까지 後 매칭 지원
 - ** 지역주민 등이 투자사를 통해 우리동네 소상공인에게 투자하고, 수익은 현물+현금으로 보상
- (골목 산업화) 로컬 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업해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산을 연결시키고, 상권관리 모델의 도입과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해 골목상권의 브랜드화 지원(상권기획, 교육·컨설팅, 사업화 등)
 - * 예시) 인천 개항로, 강릉 커피거리, 속초 서핑문화, 성수동 등 묶음 상권의 브랜드화 지원중

□ 기대 효과

- 소상공인을 고부가 서비스산업과 창조적 新제조업인 라이콘*으로 육성하고, 제조업이 결합된 골목산업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

* Lifestyle & Local Innovation Unicorn((라이프스타일 및 로컬을 혁신하는 유니콘)

6

지방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

소관부처(담당과)	담당자	전화번호
과기정통부	장두원 과장	044-202-6330
소프트웨어산업과	정재현 사무관	044-202-6333

□ 정책 현황

○ 디지털 산업분야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불균형 심화

* (디지털 산업분야 수도권 비중) 기업수 78%, 매출 89%, 종사자 86% ('20년 기준)

○ 지방대학 출신 디지털 청년인재의 수도권으로의 이탈 심각

* (지방대 출신) 지방 정착률 40% (수도권대 출신) 수도권 정착률 97% ('21. 직업경로 조사)

□ 추진 내용

○ (혁신 지구) 지방에서 창업하여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업·인재가 집적된 '디지털 혁신지구'를 '30년까지 5개 이상 조성 추진

○ (인재 양성) 지방대학의 주도적 역할을 통한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

* SW중심 대학 확대('22. 44개→'27. 100개), 비학위 고급전문 교육과정 확산, AI영재고 2개 신설

○ (강소기업 육성) 지방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디지털 서비스 강소기업 100개 이상 육성을 통한 혁신 역량 강화

* (제조 현장) AI 등 딥테크 활용 (소상공인) 데이터 기반 상권분석 (농·축산업) 스마트팜 등

○ (활용 제고) 지방주민의 디지털 활용 능력 제고 및 활용 접근성 개선

* 디지털 배움터(주민센터, 경로당 기반)를 통한 교육 고도화, 디지털 SOC 신규 확충

□ 기대 효과

○ 청년인재가 선호하는 양질의 디지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지방시대 구현

○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고부가가치화

○ 지역사회 곳곳에 디지털 일상화 실현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